

## 부위원장 모두발언

### - 개인신용평가 개선 전문가 간담회 -

2018. 1. 30.

## 금 융 위 원 회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행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2003년 본격 도입된 이후 십수년에 걸쳐  
전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안착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여신관리를 건전화하고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담보나 보증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금융소외계층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간 건실하게 발전하고 성장해 온  
우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제로 도약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II. 그간의 성과

어느 경제학자는

“위기를 낭비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 “A crisis is a terrible thing to waste.” - Paul Romer

우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등  
우리 금융시장이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의 산물입니다.

돌이켜 보면, 1997년 외환위기로

대기업 여신, 담보·보증부 대출 위주의

위기 이전의 금융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계신용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제어장치 없이 팽창한 가계신용은

카드사태, 신용불량자의 급증 등

우리 경제·금융에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날의 개인신용평가체계는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03년 카드사태를 전후로,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 결과로

개인신용평가를 전담하는 개인 CB사가 설립되었습니다.

CB사를 통해 단순한 연체정보 분류\*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용정보와 통계적 기법 등에 기반한,

현대적 의미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비로소 형성된 것입니다.

\* (03년 이전) 연체금 및 연체기간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 거래처로만 구분

금융회사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여신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정교화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우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우리 신용정보 인프라의 중요한 축을 이루면서

그간 우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분할 상환 여신관행 정착 등

여신구조도 건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용이력(Credit History)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건전한 신용생활 및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각지에 수출되면서  
아시아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교두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유수의 국가들이 백수십년에 걸쳐  
이룩해 온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불과 10여년 만에 시장에 안착시킨 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를 낭비하지 않고  
시스템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아  
더욱 단단한 성장의 디딤돌로 만든,

우리 금융시장의 저력을 보여준 모범사례라고  
자부할만 합니다.

### Ⅲ. 현행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한계

그러나,  
그동안의 혁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풀어야 하는 숙제도 많습니다.

(1) 우선, CB사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 하에서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규제체계도 미흡하여  
CB사의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CB사의 평가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과거 연체정보 중심의 평가 관행에 따라  
단 한번의 연체만으로  
저신용굴레에 빠지게 되는 채무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소위 “깜깜이 평가”, “자의적 평가” 우려 등  
개인신용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경제·금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유수의 국가에서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담보나 보증을 구하기 어려운 개인들도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이라는, 일종의 ‘평판담보’(Reputation collateral)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권 금융이  
개인을 포용해 가는 매개체로서 도입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존의 평가모델과 평가기법을 답습하면서,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년층 등 새로운 세대의  
기회를 제약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 한편,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간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빠르게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자체 여심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보다는  
CB사 평가결과에만 크게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 역량의 부족은  
차주의 리스크 등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혁신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책임있는 여신관행이 정착되지 못하다 보니,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취약차주 보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CB사 평가 결과에 따라  
적어내듯 가계대출을 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손쉽게 매각해 버린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 Ⅲ. 나아갈 방향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우선, 평가가 정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개인신용평가는  
우리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평가결과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언뜻 상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보화의 진전과 발달된 통계기법은  
양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상호보완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에 대해 연구해 온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수록  
평가의 정확성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만을 활용할 때보다  
성실 납부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를 함께 활용할 때  
평가의 정확도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과거 연체이력만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다고도, 공정하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 시스템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거래 정보만으로 신용도를 판단할 경우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 주부 · 고령층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층, 330만명을 포함한 약 1,100만명이  
최근 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소위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에 해당되어  
개인신용평가 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20대 청년들이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T 전당포'\* 등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리면서  
고금리 빚의 악순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스마트폰, 노트북 등 소형가전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는 업체  
⇒ 대체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로 한국소비자원은 약 250개 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정('16.4월 기준)

앞으로,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거래 정보부터  
도서관 이용실적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한층 고도화되면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글로벌 핀테크기업 렌도(Lenddo)는 통신기록·인성검사결과 등  
비전통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적인 개인신용평가('렌도스코어') 개발  
⇒ 부실률의 상승없이 대출승인율을 8.9%p 끌어 올림

(2) 다음으로, 평가 결과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세계 비즈니스맨의 멘토인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관한 말이지만,  
개개인의 신용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평가 지표와 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개개인의 평가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가 있으면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을  
적극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 모형에 따른 기계화된 결정인  
소위 “프로파일링”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 대응권을 도입한 바 있는  
EU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3)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CB사들은 그간

우리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빠르게 정착시켜 왔으나,  
과점 구조에 안주해 온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와 과점 구조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중한 영향력에 비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에 마련한 평가 관행 개선 노력 이외에도,

CB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신용정보산업을 경쟁적으로 재편하여

과거의 평가기법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다양한 평가모형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평가의 전 과정에서

개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경쟁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CB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게도 책임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신의 전 과정에서

CB사 평가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해당 여신의 궁극적인 책임은

금융회사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원채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IV. 맺음말

---

금번에 발표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방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하에  
관계기관 TF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그 변화의 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책임성 있는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구축은  
일회적인 대응이 아니라,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한분 한분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